

올해 계육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1. 육계산업, 지난해에 이어 장기 불황에 허덕여...



올해 육계산업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속 같다고나 할까?

이렇게 올해 육계업계가 불황을 겪게 된 전초가 된 것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3년 AI로 인한 대란이후 상당기간 육계업계는 호황을 구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종계입식이 이루어졌고 종계 품귀현상으로 공급시장이 왜곡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 원종계 농장의 입식확대는 물론이고 새롭게 원종계 사업에 진출하는 업체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실제 육용원종계 수입은 쿼터제가 실시됐던 2004년 10만9천500수에서 2006년 14만1천600백수가 입식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5만수의 원종계가 수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육용원종계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종계 생산 잠재력은 준용육계포함 약 632만1천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종계 생산 잠재력이 높다 보니 실제 종계입식수수도 크게 증가했다. 금년도 종계입식수수는 10월 현재 521만4천수로 이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468만7천수에 비해 11.3%가 증가한 수치이다.

종계입식수수 증가는 실용계 생산 증가로 이어져 금년도 실용계 생산 잠재력은 총 5억6천6백71만2천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육계가격은 1월~11월 말 현재 kg당 평균 1,15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60원에 비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병아리 가격은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원대에 머물러 육용종계 업계의 불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복 경기 이후 9월 17일~29일까지 병아리 가격은 200원대).

이에 종계업계에서는 장기간 병아리 가격이 생산비를 회복하지 못하자 9월~10월에는 50주령 이상의 종계 상당수를 조기에 도태했으며, 그 결과 11월 1일 병아리 가격은 200원대를 시작으로 해서 11월말 현재 4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육계가격 또한 1,4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황을 타개하는데 일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의 길을 찾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육계산업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미 FTA 타결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협상 시작 1년 2개월만인 지난 4월 2일 최종 타결됐다.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네 번째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 중 닭고기의 경우 통닭과 냉동 가슴살·날개 등은 12년후 폐지기로 하고 있다. 계란, 전란액은 15년, 난황은 12년 후에 관세를 완전 폐지기로 합의됐다.

그러나, 국내 피해규모가 큰 축산업계의 경우 처절할 정도로 한·미 FTA타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육계(닭고기)산업의 경우 여느 축종 보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작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는 닭고기 산업의 처한 위치와 계열화 사업이 갖는 특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정책 당국은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관세가 100% 철폐될 경우 표면상으로 드러난 피해액은 연간 1,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가격하락과 생산하락에 대한 피해 규모일뿐 전체 닭고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산업 자체가 비탄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수급조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나 닭고기 산업의 경우 이 경우가 특히 심해 더욱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6월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 대해 생산 감소 금액의 85%를 현금으로 메워 주기로 하고 또 폐업하는 농어민에게는 5년간 폐업지원

금을 지원하며, 이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1년간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분야 보완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닭·오리의 경우 사육단계의 위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고, 포장유통 의무화제도를 전체 도축작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종계 유통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우량 종계 유통질서 확립' '육계 우수브랜드 인증 및 닭 계열화업체 사육비율 확대' '삼계탕 등 멸균제품을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 등이 보완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보완대책 중 '계열화 업체의 사육비율 확대'는 이미 육계 계열화 사육비율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무의미한 것이며 시장개방에 따른 책임을 계열주체에게 전가시켰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의무화를 전체 도축작업장으로 확대하여 구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도축실적으로 상위 5개 작업장에서 포장유통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장에서 출하 후 대리점으로 포장을 해포해 유통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다양한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농가와 관련 업체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보다 명확하고 실정에 맞는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확대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1일 8만수 이상의 도계장에서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됐다.



1차적으로 8만수 이상 작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포장유통 의무화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네이밍화로 국내산과 외국산 닭고기와 차별화, 그리고 포장을 통한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포장유통 의무화 사업의 주요 타깃이었던 가공장 등 외국산 닭고기 취급업체의 사업시행은 고스란히 뒤로 유보된 채 국내산 닭고기 생산업체들만 모든 걸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한편, (주)하림 등 올해 시행에 돌입한 일부 업체들은 조속한 전면 확대를 요구했으나, 8만수 미만의 중소규모 도계장들은 포장유통 의무화의 전면시행과 동시에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에 따르면 현행 규정대로 각 업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전량에 대해 심부온도를 2℃에 맞춰 밀봉포장하기 위해서는 수당 1백50~2백원의 원가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유통단계에서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격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반면 중소규모 도계장들의 경우 포장시 심부온도를 2℃로 맞추기 위해서는 '에어칠링' 시스템으로 교체 불가피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비를 갖춘다고 해도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경쟁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들 도계장들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거나 시장 자율에 맡겨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책상 모순점도 드러나고 있다. 현행 도축장 반출시 냉장 포장육의 경우 심부온도가 2℃인데 반해 식육판매업소 진열상자, 전기냉장 시설 등의 내부 냉장온도는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제도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포장육의 도축장 반출시 심부온도를 4℃ 이하로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2008년부터는 1일 5만수 이상 처리하는 도계·도압장에 대해 포장유통 의무화가 확대 행된다.

4.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 시행 가속화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이 2005년 12월 첫 대의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예된 이후 약 2년여 만에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육계의무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는 지난달 서면결의 형식으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 결과 대의원 135명 중 90명(찬성 89명, 반대 1명)의 서면결의서(2007. 11. 11~11. 19)가 접수되어 관리위원 및 감사구성(안)이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결됐다.

그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관리위원(대의원)과 감사 12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번에 대의원 회의에서 선정된 관리위원을 포함해 정부, 공동준비단체, 학계, 소비자, 도계장 대표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위촉, 관리위원회회를 개최해 육계 의무자조금 시행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육계 의무자조금은 지난 2002년 4월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본회를 비롯 농협, 양계협회 등 3개 단체가 2005년 8월에 육계 의무자조금 도입을 합의하고 2005년 12월에 첫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유예됐다. 그 후 2년여에 걸쳐 3번의 대의원 총회를 더 개최했으나 그 때마다 무산돼 육계 의무자조금 출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관리위원이 선정되면서 자조금 사업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5. 사료값 폭등… 육계 생산비 인상 압박

최근 사료의 주원료로 공급되는 옥수수가 바이오에탄올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사료가격이 상승돼 축산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실제 올해 사료가격은 지난해 대비 약 25%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업계 등 관련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일련의 사태는 사료원료의 수급문제 차원이 아닌 전 세계의 에너지 문제인 동시에 환경문제와 선박 등 운송수단의 부족에 따른 선임의 폭등, 그리고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 생산비가 급등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 악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가득이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업계는 육계 생산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가격 인상에 옆친데 덮친 격으로 국제유류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까지 이어져 육계 생산비가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 및 닭고기 업체가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사료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수입이 완료돼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내년 제조용 사료원료들도 인상분을 반영한 가격에 수입됐으므로 내년에도 이러한 사료가격 인상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료가격 안정기금' 마련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 육계농가가 사료값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